

게임물등급위원회 종합감사 결과보고

가.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2. 20. ~ 3. 5. (10일간)

■ 감 사 반 : 감사담당관 외 4명

■ 감사내용

○ 2008년~2012년 현재까지 기관 및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나. 감사결과

(단위: 건)

합 계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주의	시정	개선	통보 등		
건수	금액	인원	건수	인원	건수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12							3	—	—	8	1	—

※ 첨부서류 :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

감사처분 요구내용

(게임물등급위원회)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1	<p>○ 「게임법」상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정의 개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함)에는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의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된다는 등의 요건 외에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에 관한 사항은 사전보다는 사후에나 확인이 가능하므로 위원회가 등급분류 시에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최근 게임업계는 대형 로펌을 동원하여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향후 유사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러한 상황에서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정의를 현행대로 적용할 경우 위원회의 등급분류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게임물에 대한 사행화를 방지하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속한 정의 개정이 필요함 	<p>○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과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법상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정의에서 단서조항의 삭제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p>○ 대행업자를 통한 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업자는 게임물 등급분류신청을 대행업자를 통해 신청하는 사례가 많고, 특정 대행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게임제작 분야(게임업자)와 신청분야(대행자)의 분업이 고착화 되고 게임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위원회 심의기준 등에 무관심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대행업자들은 실리를 목적으로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반복적으로 재신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의 등급분류업무가 가중되고, 게임업자에게도 이중 부담이 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또한,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에는 공인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급분류 신청 대행을 위해 게임업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대행업자에게 대여하고 있어 관련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음 	<p>○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의 불법 대행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
3	<p>○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게임법」 및 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규정에 의거 등급분류 심의에 관한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심의에 참석한 심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p>○ 주의요구 및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 주의 - 등급위원회 회의록 작성 · 관리 철저 및 대외 공개,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p>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을 대외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11월부터 현재까지 등급분류 심의 회의록을 적기에 작성하지 않고 있는 등 회의록 작성·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으며, 또한 등급분류 심의 회의록을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고 그 외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등급분류 심의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하고 있음 - 또한, 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및 「기술심의절차규칙」에 따라 등급분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심의 대상은 60일)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하나, 아케이드게임물의 경우 사행성 관련 심층 검토 등의 이유로 기한 내 처리를 못하고 있어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음 <p>※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은 2009년~2011년 평균 26일,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은 평균 71일이 소요됨</p>	<p>게임물 등급분류 처리기한 준수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기 바람</p>
4	<p>기술심의를 위한 게임물 검토·분석(테스트) 방식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심의 시, 게임기 작동을 위해 직접 동전 투입(1게임당 1,400개)하거나, 지속적인 동작을 위해 버튼 자동 누름장치(똑딱이) 사용 등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 운영정보표시장치(이하 “OIDD”라 함)의 저장 데이터를 다운받아 이를 분석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과정과 게임 프로그램 속에 사행성(예시, 연타 등) 내용을 숨겨 놓은 경우에 일일이 검색·분석하는 등 업무를 비능률적으로 처리하여 등급분류업무가 지연되는 등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음 <p>※ 특히, 상기 테스트 중 기기고장, 프로그램 수정·보완 등을 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소요기간이 약 2배로 증가</p>	<p>○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테스트의 자동화시스템 개발 및 OIDD 데이터 분석프로그램 보완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p>○ 게임물과 놀이형 유기기구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법」 제2조에 의거 ‘게임물’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 유원시설업은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놀이형 유기기구’에 게임적 요소를 가미된 ‘신종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로 등급분류 결정을 받아 게임제공업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어 「게임법」 제2조 규정의 취지 등에 저촉되고 있으며, 	<p>○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게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놀이형 유기기구’와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상호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물’은 「게임법」 소관부서에서, ‘놀이형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 소관부서에서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 명확한 구분이 곤란한 ‘게임물’과 ‘놀이형 유기기구’의 경우 소관부서 간에 충돌이 생기거나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관련업무 처리에 문제가 야기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6	<p>○ 사후관리의 제도적 미비점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법」에는 등급분류 취소 요건을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 된 불법게임물을 적발하고도 후속조치가 어려워 사후관리업무에 지장 초래하고 있음 - 최근 들어 ‘등급분류 결정 취소’에 대한 무효소송 제기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향후에도 유사한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변조 된 불법게임물에 대한 취소요건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p>○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에서 규정한 등급분류 취소 요건을 현실과 부합되게 보완하기 바람
7	<p>○ 운영정보표시장치 사업자 선정 및 운영방식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운영정보표시장치(이하 “OIDD”라 함) 제작공급 사업자 선정 시 특정업체로 제한하는 것과, OIDD 공급단가를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특혜 의혹과 독점 시비를 초래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19조 및 제23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 게임업체가 OIDD 주문 시, 주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 소지가 있고,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수동 조작하는 것은 부정과 비리의 우려가 있음 - 특히, 사업자가 OIDD 제작·공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자, 위원회는 공급원가에 손실분을 반영하여 공급단가 인상을 통해 보상해 주는 등 공급단가를 부적정하게 책정하고 - OIDD 성능·인정 심사료를 부과·징수하면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제2기 사업추진도 지연이 예상됨 	<p>○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선정 시 상대평가를 통한 독점 방식에서 절대평가를 통한 인증 방식을 도입하고, 주문자가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주문시스템을 개선함과 아울러, OIDD 공급단가는 시장 자율에 따라 결정·운영되도록 개선하고 - 심사수수료 부과 및 정산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 제2기 OIDD사업 조속 추진할 것
8	<p>○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 지급방식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게임물의 근절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11. 4월부터 「불법게임물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p>○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 지급 방식 변경 등 포상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도 전체 포상금(61명, 45,640천 원) 중 2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총 9명(23,700천 원)으로 이들은 전체 포상금 지급액의 51.9%를 차지하고 있고, 2012년도는 2월까지 지급된 포상금(48명, 61,270천 원) 중 2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총 13명(36,650천 원)으로 전체 포상금 지급액의 59.8%를 차지하고 있어 신고 포상금이 일부 소수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 2012년 2월까지 전체 포상금 집행 예산(120,000천 원)의 51.1%가 집행되어 하반기에는 포상금 제도를 더 이상 운영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개선이 필요함 	<p>금이 일부에 집중되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9	<p>○ 조사연구사업 관련 국외출장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2007년부터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자체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동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였는데도 2008년~2009년 기간 중 동 사업에 국외여비를 편성하고, 일시에 과반수 이상의 등급위원회 위원이 국외출장을 실시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 부족 등으로 등급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 「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따르면 위원회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위원회는 2010. 6. 4. 사단법인 ○○○○○평가원과 ‘게임물 등급위원회 업무분석 및 원가산정 등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수행을 위한 국외출장(2010. 7. 6.~7. 15. 유럽, 미국)시 위원회 직원 2명을 동행시키면서 항공료 등 13,311천 원을 위원회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동 법인의 연구용역사업비에서 지원받았음 	<p>○ 주의요구 및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관련자 주의 - 임·직원들의 불요불급한 국외출장 자제 및 위원회의 주된 직무인 게임물 등급분류에 충실할 것
10	<p>○ 업무추진비 등 집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업무추진비 등 집행지침」은 건당 10만 원 이상 결재 시 증빙서류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대상의 소속 및 성명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집행하였으며, - 공식적인 업무 협의를 제외하고는 주말에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원회는 ‘09년~’11년 기간 중 공식 행사도 없는 주말에 업무추진비로 총 10건 416,950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휴가 기간 중 총 7건 369,560원을 집행하였음 -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간담회 등을 수용비(201목)로 	<p>○ 주의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 주의 - 예산 편성·집행시 관련 지침을 준수할 것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p>편성하여 집행하는가 하면, 수용비(201목)나 여비(220목)로 집행하여야 할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며, 위원회 업무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에게 경조사비 총 23건 2,200천 원('09년~'11년)을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예산을 운용하였음</p>	
11	<p>○ 부서 간 등급분류 업무 협조체계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위원장 아래에 사무국과 전문위원실을 두고 사무국은 사후관리 업무를, 전문위원실은 등급분류 업무를 처리하는 이원적 조직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 전문위원실은 등급분류 신청된 게임물의 사전검토 및 기술심의 과정에서 사무국의 협의과정 없이 바로 위원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어 전문위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등급분류가 결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 또한 사무국과의 협조가 미흡하여 위원회의 주된 등급결정 업무에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p>○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분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전문위원실과 사무국간의 협조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p>○ 퇴직직원의 게임업체 취업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12년 1월 기간 동안 위원회 비정규직 직원(전문위원 및 조사관) 중에서 퇴직한 직원은 70명으로 퇴직자의 대부분이 관련 게임업체에 재취업하거나 게임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 이는 게임업체와 위원회 직원과의 유착 또는 특혜시비 등이 우려되고, 위원회 재직 중에 취득한 업무상 비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이나 사후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p>○ 현지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자의 업무상 취득한 비밀 준수 등 퇴직자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